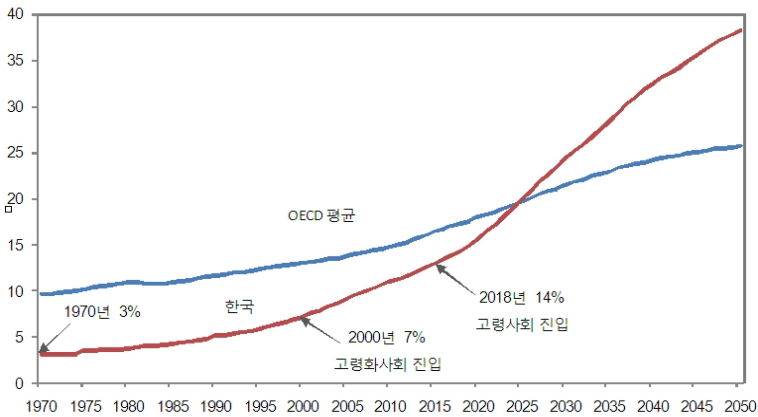


### Ⅲ.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불안감의 확산

#### 1. 고령화의 진전과 불안한 노후

■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임.

〈그림 Ⅲ-1〉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 (단위: %)



주: 1) 고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총인구 X 100  
자료: OECD.

■ 다음 〈표 Ⅲ-1〉에서는 공식 은퇴연령 이후 생존기간을 나타내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인 16.3년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19년 이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음.

○ 은퇴 후 평균 생존기간 동안에는 연금이나 은퇴 전 마련해 놓았던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노후 대비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가계는 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1〉 실제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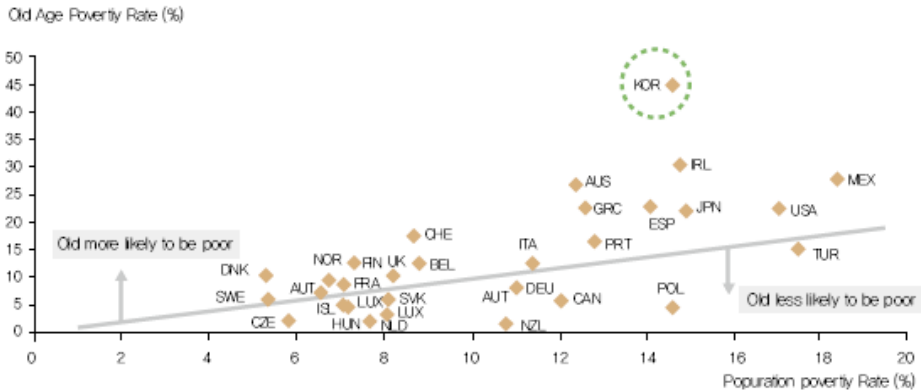
구분	기대여명(A)	공식 은퇴연령(B)	A-B
한국	79.1	60.0	19.1
일본	82.4	62.0	20.4
미국	78.1	65.8	12.3
영국	79.1	62.5	16.6
OECD 평균	78.9	63.2	16.3

주: 공식 은퇴연령은 공적연금 개시 연령의 의미함.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2011)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4.6%로 높은 수준이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OECD 최고 수준임.
- 향후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됨.

〈그림 Ⅲ-2〉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전체인구 빈곤율 간 관계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가 조사한 고령자가구 소득원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58.4%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자본소득이 26.4%인 반면, 공적지원은 15.2%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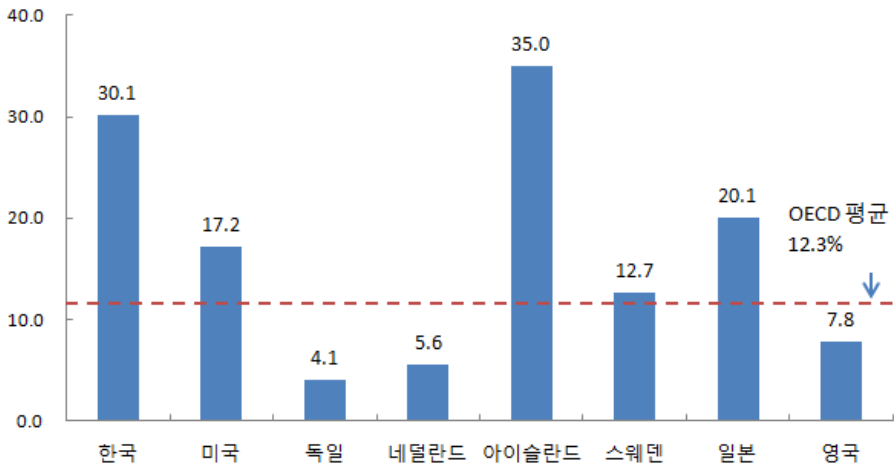
○ 우리나라 고령자가구의 공적이전비중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도입(1988)이 늦은데 기인하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근로소득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65세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은 30.1%로 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음.

○ 이는 미흡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OECD는 노인들의 소득수준과 빈곤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아이슬란드 등과 더불어 노후소득 위협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함.

〈그림 Ⅲ-3〉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비율

(단위: %)



자료: OECD(2011), Labor Force Statistics.

■ 200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41.4%)을 1순위로, 다음으로 건강문제(40.3%)를 제기함.

〈표 Ⅲ-2〉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민하는 어려움

구분	계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과의 관계	경로 의식 약화	일상 생활 서비스	복지 시설 부족	기타
2009	100	41.4	2.0	5.7	40.3	4.4	0.2	1.7	0.9	2.5	1.0
도시	100	42.4	2.7	6.7	36.9	4.7	0.2	2.0	0.7	2.7	0.9
농어촌	100	39.3	0.6	3.5	47.3	3.8	0.2	1.0	1.2	2.0	1.1
65~69세	100	43.8	3.8	6.9	34.9	3.1	0.2	2.6	0.9	3.0	0.8
70~79세	100	40.6	1.3	5.2	42.5	4.5	0.2	1.4	0.8	2.2	1.2
80세 이상	100	37.6	0.1	4.1	46.8	7.4	-	0.1	1.2	2.0	0.8
독거노인	100	43.6	1.1	3.7	37.9	9.5	0.1	0.7	1.3	1.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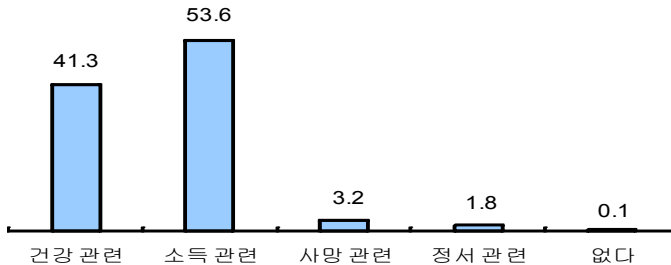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9), 『사회조사통계』.

■ 다른 조사인 보험연구원의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함.

- 조사결과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대부분 소득 감소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위험(53.6%)과 의료비 및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41.3%)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Ⅲ-4〉 노후생활 불안 요소

(N=1,2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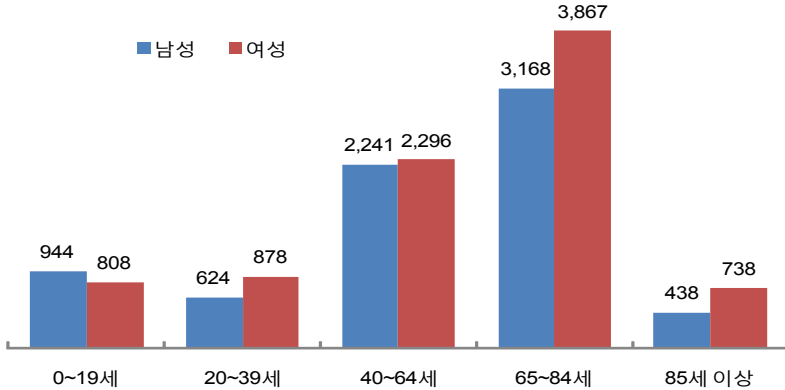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0. 4), 『2010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같은 조사에서 노후생활 대비 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후소득은 현재 소득수준의 약 58.9%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감안했을 때, 퇴직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약 40%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소득측면의 불안요인과는 달리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비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보건사회연구원 『생애의료비 추정자료』(2011)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증가가 향후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함께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노후 의료비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의료비는 남성이 약 7천 415만 원, 여성이 약 8천 787만 원 수준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약 20%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반면, 생애의료비의 절반은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Ⅲ-5〉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

(단위: 만 원)



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10).

- 우리나라 국민이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3.7%로 2008년 OECD 평균 70.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OECD 회원국 평균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자의 경우 72.6%, 여자 68.0%임에 반해, 우리나라 국민 남자와 여자의 경우 각각 48%, 39.5%로 OECD 평균을 훨씬 하회함.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병률 등 현재의 건강에 대한 다른 조건이 비교 대상 국가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것임.

〈표 Ⅲ-3〉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비율

(단위: %)

구분	2003				2008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4.1	83.6	84.5	(2004)	84.9	84.4	85.3	(2007)
오스트리아	-	-	-		75.5	77.8	73.4	(2006)
벨기에	76.2	79.1	73.6	(2001)	76.7	79.5	74.3	
캐나다	88.2	89.3	87.1		88.1	88.4	87.8	
칠레	-	-	-		-	-	-	
체코	62.2	66.4	58.5	(2002)	68.2	73.4	63.3	
덴마크	77.9	79.5	76.4	(2000)	79.4	81.6	77.3	(2005)
핀란드	66.5	66.0	66.9		67.7	67.7	67.8	
프랑스	75.6	78.6	72.7	(2004)	72.4	74.9	70.1	
독일	72.6	75.9	69.4		64.7	66.4	63.0	
그리스	-	-	-		76.4	-	-	
헝가리	45.0	50.3	40.3		-	-	-	
아이슬란드	78.7	82.1	75.1	(2004)	80.6	82.4	78.8	
아일랜드	86.5	84.5	88.0		84.4	85.7	83.2	
이탈리아	59.8	65.0	55.0		63.4	67.6	59.5	
일본	38.7	40.9	36.7	(2004)	32.7	34.7	30.9	(2007)
한국	45.6	50.7	41.3	(2001)	43.7	48.0	39.5	
룩셈부르크	72.5	75.1	70.0		74.5	76.1	72.8	(2007)
멕시코	66.2	70.8	62.9	(2002)	65.5	66.9	64.2	(2006)
네덜란드	77.4	81.1	73.9		80.6	82.8	78.4	
뉴질랜드	89.6	89.4	89.8		89.7	89.6	89.8	(2007)
노르웨이	79.9	83.0	77.0	(2002)	80.0	82.0	78.0	
폴란드	53.2	56.3	51.0	(2004)	57.7	61.2	54.6	
포르투갈	-	-	-		40.0	45.7	34.6	(2006)
슬로바키아	34.4	39.5	30.6		31.1	34.4	28.5	
스페인	68.3	73.2	63.5		69.8	74.8	64.9	(2009)
스웨덴	74.5	78.8	70.4		75.9	78.9	73.0	(2007)
스위스	85.8	87.8	84.0	(2002)	86.7	88.2	85.4	(2007)
터키	55.0	62.0	49.0		66.8	74.2	62.4	(2007)
영국	74.5	74.7	74.3		76.0	76.0	76.0	
미국	88.7	89.7	87.8		88.0	88.9	87.2	
평균 (26)	70.5	73.2	68.1		71.1	73.4	69.0	

자료: 보건복지부(2011).

- 한편, 중·고령자 가계조사 결과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6년 37.7%, 2008년 34.4%로 나타나고 있음.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후 의료비지출 부담의 빠른 확대는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Ⅲ-4〉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주관적 건강상태	2006	2008
매우 좋음	3.5	3.0
좋은 편	34.2	31.4
보통	31.3	36.1
나쁜 편	24.3	24.1
매우 나쁨	6.8	5.4

자료: 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

- 앞서 제기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노후 의료비지출의 확대 가능성은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과 맞물려 건강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 배경요인

- (사적 노후준비의 부족)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65% 가량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안중범·전승훈 2006).
- OECD(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약 42.1%로 미국의 78.8%, 영국의 70%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인 68.4%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5〉 평균 소득자의 연금소득 대체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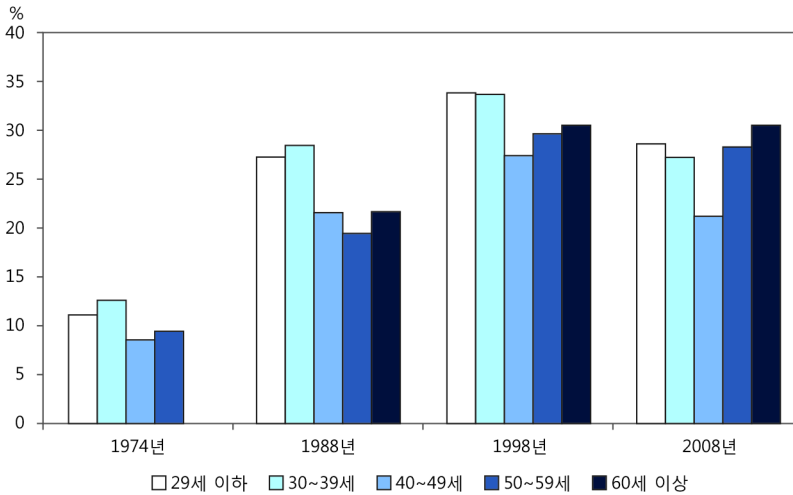
구분	공적 연금소득 대체율	사적 연금소득 대체율	전체 연금소득 대체율
한국	42.1	-	42.1
일본	33.9	23.0	56.9
미국	38.7	40.1	78.8
영국	30.8	39.2	70.0
OECD 평균	45.7	22.7	68.4

자료: OECD,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저축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위 연령계층의 저축률 하락으로 완전한 V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전 연령계층 중 상대적으로 젊은 20~40대 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40대의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이들 계층이 저축률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결과는 베이비부머들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이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유경원 2010)됨.
- 마이너스(-)의 저축계층이라 할 수 있는 60대 등 고령자 저축률은 최근 들어 하락하기보다는 비슷한 수준 내지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통상적인 이론 예측과는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Ⅲ-6〉 연령별 저축률 수준의 변화 추이



■ 국민연금연구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2010)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8.2%로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후 준비 상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특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고연령집단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고학력자일수록 비교적 많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취업형태에 있어서도 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나은 노후준비를 보이지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

■ (높은 공적연금 의존도)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살펴보면 1순위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등을 포함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이었음.<sup>2)</sup>

- 현재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의 주요 수단은 공적 연금이며 다음으로 근로활동, 일반적금 및 예금 순서임.

2) 보다 자세한 은퇴 관련 공적 제도는 〈부록 1〉을 참조 바란다.

〈표 Ⅲ-6〉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일반 적금 및 예금	14.8	20.6	24.8
주식이나 채권 수익	0.6	1.8	0.5
부동산 투자	15.1	16.1	11.9
근로활동	23.7	15.0	11.0
개인연금	2.4	3.0	2.1
사적보험(개인연금 제외)	0.9	2.1	5.0
퇴직금(퇴직연금)	2.6	1.5	2.0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2.3	6.5	10.4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	29.0	23.4	20.3
유산	0.8	0.9	2.2
배우자의 소득	7.4	8.2	8.6
기타	0.5	0.9	1.2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KReIS 원자료.

■ 노후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65%가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함.

- 경제력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보다 평균 5세 정도 낮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배 정도 많아 큰 차이를 보였음.
- 최종학력이 낮아질수록, 근로자보다는 비취업자 집단에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과도한 비유동성자산)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성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20%였던 자산 중 평균 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18%로 2% point 더 감소하였음.

〈표 Ⅲ-7〉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자산구성

자산 종류	2006	2008
금융자산	0.20	0.18
비금융자산	0.80	0.82

자료: KLoSA, 각 년도.

자산 종류	전체	2005	2007	2009
실물자산	0.78	0.75	0.78	0.80
금융자산	0.17	0.18	0.17	0.16
기타자산	0.05	0.07	0.05	0.04

자료: KReIS, 각 년도.

○ KReIS 자료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물자산 비중은 3차례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다음으로 금융자산 중 현금 및 은행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저축성 예금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 중에서 정기, 종신, 연금보험 등을 포함하는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0%에서 2008년에는 다소 하락한 6%로 나타났음.

〈표 Ⅲ-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금융 자산구성

항목	2006	2008
현금 및 은행예금	0.77	0.79
저축성 예금	0.09	0.11
주식/투신/뮤추얼펀드	0.01	0.02
채권	0.00	0.00
보험	0.10	0.06
契	0.01	0.00
기타	0.02	0.02

자료: KLoSA, 각 년도.

■ (저수익성 유동성자산 보유) 가구의 연령대별로 자산보유 현황을 살펴 보면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은행예금, 저축성 예금 등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과 2008년 조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 연령대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지면 거의 전체 자산을 안전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9〉 연령대별 금융자산 중 안전자산 비중

구분	2006	2008
40대	0.74	0.76
50대	0.81	0.87
60대	0.91	0.93
70대	0.96	0.97
80대	0.97	0.98

주: 안전자산에는 현금 및 은행예금, 저축성 예금 포함.  
자료: KLoSA, 각년도.

■ 연령대를 좀 더 세분화하여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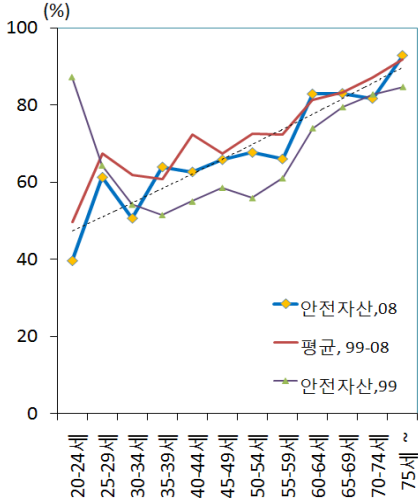
○ 보통 고연령층은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반면 저연령층은 그 반대의 성향을 보여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됨.

■ 정리해 보면 고령화의 진전은 가계부문의 불안감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안감의 확산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기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가계의 소비·저축, 자산보유 행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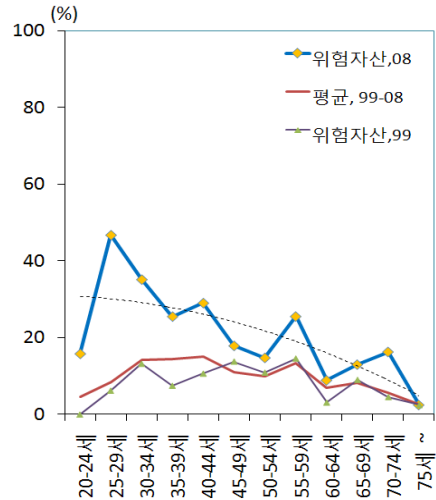
-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현재의 주택, 교육, 노동시장의 여건 등은 가계로 하여금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내지 경제적 여력을 소진시켜 다른 나라의 가계에 비해 보다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사항은 특히 가계의 소비, 자산축적 내지 자산보유 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과도한 불안감의 확산은 가계의 예비적 행태를 강화시켜 저수익성 자산보유를 통해 은퇴자산 축적을 저해하고 아울러 건강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의료비지출의 확산을 가져와 고령화의 부정적인 효과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Ⅲ-7〉 연령에 따른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 보유비중 비교

가. 안전자산(예금)



나. 위험자산(주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각년도.

- 다음 장에서는 가계 후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소비지출에 대한 은퇴의 영향을 분석하여 은퇴 전후 실제 가계의 소비지출 행태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4장에서는 은퇴소비의 토대를 형성하는 자산의 변화가 은퇴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2장에서 제기한 불안감과 중·고령자의 자산구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함.